

벤처스타트업 단체 “자본시장 개편안 속도·균형 필요”

벤처협회·VC협회·코스포 기자회견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등 ‘반대’
정책시행 유예하거나 재검토 입장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속도’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추진안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물 경우 혁신기업에 미충분을 보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벤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 도입과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들의 퇴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등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교감이 없었던 만큼 빠른 시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금융 정책협의회’를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동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벤처업계 대표들이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조건 시행 유예 및 기준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우려와 보완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수는 올랐지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이 흔들리면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발표한)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로 상장 폐지 기업이 늘면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을 인위적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 등으로 세분화하려는 세그먼트 방향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관련 정책 시행을 유예하거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 투자 생태계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선진화돼야 한다. 그 핵심은 글로벌 기술이다. 기술기업들이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도 약하는 성장사다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은 관련 기업들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면서 “세그먼트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상장기업들은 강등을 피

하기 위해 미래 투자 대신 단기 이익에 집중하고 스탠다드에 남겨진 벤처기업들은 낙인이 찍힐 것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해야한다면 반드시 기술가치 중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면 코스닥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는 업계의 제안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코스닥 스탠다드 세그먼트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관 자금 유입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쪼개기 상장도 통제돼야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현장 상황은 다르다. 상장의 문이 좁아지면 투자와 회수 등 순환이 멈추게 된다. 규제의 잣대는 함께 상정했느냐가 아니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지배주주가 가져갔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전선, 동해안-수도권 HVDC 2단계 수주

1단계 동해안-신가평 구간 이어
2단계 1460억 수주... 총 2340억

LS전선이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주를 통해 전력 인프라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2단계 사업을 토크 방식의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안-동서울 구간 H VDC 케이블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은 2024년 동해안-신가평 구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1단계 수주액은 약 880억원, 2단계 수주액은 약 1460억원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2340억원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



LS전선 직원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HVDC 케이블이 투입되는 동해안-신가평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송전망을 보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LS전선은 국가핵심기술인 500kV급 HVDC 케이블을 독자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525kV·90°C급 HVDC 케이블도 상용화하며 대용량 전력망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국내외 사업 경험도 쌓고 있다. LS전선

은 제주 2·3연계 사업과 북당진-고덕 1·2단계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내 HVDC 사업에 참여해 왔다. 해외에서는 독일 송전망 운영사 테넷이 추진하는 약 7조원 규모 초고압 전력망 사업에서 단일 공급사 기준 최대인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HVDC는 교류(AC) 대비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대용량 전송에 유리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HVDC가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HVDC 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전력망에서 검증된 상용화 경험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주요 HVDC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글로벌비스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 협력사 100여곳과 논의

현대글로벌비스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을 위해 100여개 협력사와 머리를 맞댔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2일 제주에서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규복 현대글로벌비스 대표를 비롯해 협력회 103개 사 임직원 등 총 121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미래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여성 소상공인, ‘실속 경영’ 뛰어나”

여성경제연구소 WERI 보고서

여성이 사장인 소상공인들이 남성 소상공인보다 매출 등 몸집은 작지만 영업이익률 등 내실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속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돌봄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여경연)가 15일 내놓은 ‘여성 소상공인의 특성 및 시사점’을 담은 WERI 보고서에서 나왔다.

전체 여성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7.5%, 갯수로는 총 328만 7455개였다. 여

성 소상공인은 남성 소상공인과 비교해 ‘교육서비스업’(2배), ‘숙박 및 음식점업’(1.4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형인 연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남성 소상공인이 2억 4600만원, 여성 소상공인이 1억 33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도 남성(2900만원)이 여성(2000만원)을 앞섰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여성 소상공인이 15%로, 남성 소상공인(11.8%)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여경연은 “여성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규모에도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위기 소상공인 재기 밀착 지원

위기징후 모니터링 후 알림톡 발송
수신자 대상 ‘1대1 맞춤형 경영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재기를 연중 밀착 지원한다.

소진공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위기 소상공인 1200개사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맞춤형 밀착 멘토링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소진공·지역 신용보증재단·17개 민간은행은 위기 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한 후 ‘위기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은 ▲소진공 대출 이용자 중 연체 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용자 중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저소득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중 17개 민간은행의 최근 6개월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다.

‘위기 알림톡’을 수신한 소상공인에 대해 해선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1대1 맞춤형 경영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진단 완료 후 도출한 개선 전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회의 전담 PM 밀착 관리를 제공하며, 희망할 경우 전문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는 채용멘토링(최대 2회)을 추가 제공한다.

또한 진단과 멘토링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후배 네트워킹, 우수상품 판매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주관기관별 강점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제주항공, 지난달 황금연휴 수송객 LCC 1위

5개월 연속 月 수송객 100만명 돌파

제주항공이 지난달 황금연휴 여행 수요에 힘입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했다. 5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선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달 수송객 수는 110만 7549명으로 전년 동기(102만 9004명) 대비 7.6% 증가했다. 국내선은 42만 4036명으로 1.9%, 국제선은 68만 3513명으로 11.5% 각각 늘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 117만 6532명, 2월 106만 7659명, 3월 106만 7167명, 4월 112만 7370명에 이어 5월에도 100만명 이상을 수송했다. 국적 LCC 가운데 5개월 연속



제주항공 B737-8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넘긴 곳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1~5월 누적 수송객 수도 554만 6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만 1482명)보다 19.8% 증가하며 LCC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탑승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항공의 5월 전체 탑승률은 88.2%로 국적 LCC 9개사 평균(85.8%)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